

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

-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고성장률 전제로 한 해법을 선택
 - 2% 이상의 고성장률 전제로 하여 세수증가분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삭감부담을 줄일 수 있음
- 그러나 과거의 실패 경험 등에 비추어 실질 2% 이상의 GDP성장율을 재건건전화의 전제로 하는 것은 부작용 등 위험을 내포
- 따라서 불확실 요소가 많은 경제성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세출과 세입의 개혁을 담을 필요가 있는 데,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음
 - 재정건전화계획 자체를 2018년 재검토하는 규정을 담아, 2017년 4월 소비세 인상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소비세 증세와 세출삭감의 필요성을 판단키로 함

□ 재정수지 흑자화를 위한 기본방침

- 일본정부가 재정건전화 계획의 기본방침을 확정
 -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*의 흑자화를 위한 로드맵으로서, 경제성장률에 의한 세수 증가로 7조엔, 세출삭감 등으로 9.4조엔을 충당
 - * 기초 재정수지 : 국제발생 등 새로운 빚을 내지 않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만큼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
 - 실질 2%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제로 한 성장의존 계획으로 10%이상의 소비세율 인상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함
 - 2017년 4월 소비세 인상(8→10%)에 입각하여 2018년경 계획 전체를 재검토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
- 일본 내각부는 2015년 2월에 제시한 경제재정에 관한 중장기 시산에서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2개의 적자보전 시나리오를 제시
 - ① GDP성장율을 실질 2% 이상, 명목 3% 이상인 경우에는 9.4조엔
 - ② 실질 1%, 명목 1% 중반정도인 경우에는 16.4조엔
- 일본의 잠재성장율은 실질 1%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, 재정건전화 계획은 실질 2%의 높은 성장률 예상한 ①의 고성장 시나리오를 선택

- 고성장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경우,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16.4조엔의 재정적자 중 7조엔은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흑자화에 필요한 금액은 이를 제외한 9.4조엔으로 추산
- 9.4조엔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든가,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, 세입은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10% 이상으로 수정하지는 않기로 함
 - 10%를 상회하는 소비세 증세를 하는 경우 그만큼 경기의 하강이 예상되기 때문임
-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놓아
 - 재정건전화계획을 2018년에 재검토하는 규정을 담기로 함
 - 2017년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소비세 증세와 세출삭감의 필요성을 판단키로 함

□ 사회보장지출과 지자체의 지출 역제가 주된 세출삭감책

- 일본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세출삭감책 등을 검토하기로 함
 -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세출 증가를 억제하는 외에, 세출을 억제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
- 재정건전화계획은 아베 총리가 2014년 11월에 소비세율 10%로의 인상 시기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할 당시 발표되었음
 - 일본정부는 금년 여름까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토론과 조정을 거쳐, 「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」과 함께 동 계획을 완성시킬 예정임

□ 재정수지적자의 對GDP비율 1%정도를 중간목표로

- 일본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한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 대비 GDP비율을 줄이는 새로운 목표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었음
 - 분도인 GDP가 늘어나면 채무가 줄지 않아도 재정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, 성장의존의 색채가 짙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하고,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가 달성된 이후 새로운 목표로 하겠다는 방향임

- 다만, 2018년도에 기초 재정수지의 적자폭을 GDP대비 1%정도로 하는 중간목표를 계획에 담을 방침

□ 평가 : 고성장률 전제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의 위험성

- 일본정부가 실질 2% 이상의 GDP성장율을 재건건전화의 전제로 하는 것은 위험을 내포
 - 과거의 재정건전화계획도 고성장률 기대하고 세출삭감에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상태는 개선되지 않음
 -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에 기초한 2003년까지의 중기재정 시산에서는 이번 계획과 마찬가지로 명목 성장률의 전체를 3.5% 고성장률과 1.75%의 저성장 2가지 시나리오
 - 결과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 국내 부실채권문제로 경기가 후퇴하는 바람에, 기간 중 명목성장율은 마이너스로 됨
- 2006년에 만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등 과거에 발표된 계획도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했으나 모두 오산으로 끝남
- 고성장률 전제로 하면, 세수증가로 재정적자가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세출삭감의욕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음
 - 2006년 재정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도 사회보장비 삭감목표를 제시했으나,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
- 이번 계획에서 세출삭감책으로 사회보장비를 삭감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나 세출을 줄이는 효과는 예상하기 어려움
- 따라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경제성장에만 의존하지 않는,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세출과 세입의 개혁이 필요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5.5.4.)